

광주 출산율 증가세...산후조리 환경 '낙제점'

출생아 등 반등 전환에도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무' 민간 시설도 '예약 전쟁'...출산 7개월 전부터 마감 2주 이용료 500만원 육박...전국 평균 웃도는 수준

광주지역 출산율이 반등 흐름세를 뒀지만 정작 산모들이 체감하는 산후조리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어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현실이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과 이용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작 출산 이후를 책임질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0.70명) 대비 8.8%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 역시 6507명으로 전년보다 47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후조리 인프라는 과거 저출생 시기 축소된 이후 회복되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산후조리원은 7곳으로 모두 민간 시설이며, 과거 대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산모들은 임신 초기부터 산후조리원 예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인기 시설의 경우 임신 12주 이전에 예약이 마감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출산 예정일과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자리가 채워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비용 부담 역시 크다. 광주지역 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는 평균 400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일부 시설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산모들은 비용보다 '이용 가능 여부'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한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특정 산부인과와 연계돼 해당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 산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과 조리원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원정 산후조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남구에 거주하는 산모 최영현씨(34)는 "조리원을 들어가기 위해 조리원이 있는 산부인과로 일부러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이 밀려 못 들어가갈 상황에 놓였다"며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산부인과 대기 시간이나 조리원 예약만 보면 탄 세상이 아니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에서 간호사가 산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025년 기준 전국에서 20여곳이 운영 중이며,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남의 경우 8개 시군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주 이용료가 150만~180만원 수준으로 민간 대비 절반 이하에 불과해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반면 광주는 공공 인프라가 전무해 모든 수요를 민간 시설이 떠안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과 이용 불균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가량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체 비용 대비 지원 규모가 작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 짝한다. 산후조리원 시설 1곳을 조성하는 데에는 최소 70억~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도 일반적으로 1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의 단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선거절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으로 반복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은 광주 5개 자치구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함께 이용료를 1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의료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산모 김현서씨

(36)는 "첫째를 낳을 때도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이 공약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돌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며 "선거 때마다 비슷한 공약이 나오는데 정작 언제, 어디에 생기는 구체적인 계획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장려 정책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아이를 낳고 나서의 환경 조성인데, 그 부분은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이라며 "공약으로만 나올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이 절대적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이 일부 지원하고 관리하는 '준공공화'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출산 이후 회복과 돌봄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산후조리 문제는 단순히 시설 부족을 넘어 출산 이후 돌봄을 개인에게 맡겨온 구조적 문제"라며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방문형 산후돌봄 서비스, 간호사 가정 방문,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청년 인재 양성 농지은행 제도 개선 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원이 눈길을 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제가 영농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에 달한다. 이는 청년농들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따라 마련됐다.

먼저 공사는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은행 활용을 돕고 있다.

사내 자격시험을 거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을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선발해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연장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또 공사는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농지가 흩어져 있으면 농지 간 이동에 시간이 소요돼 영농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농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지를 집약화하고 있다.

또 청년농 간 농지를 맞바꿀 수 있는 '농지 상호교환 제도'를 신설해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30여ha의 농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나주=주호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대기업 정유사 4곳·석유협회 압수수색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짝짜미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내회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시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주 4.5일제 확산 시동...광주상의, 워라벨 지원 본격화

기업 자문·상담 전면 지원...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등

광주지역에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 지원이 본격화된다.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재정 지원이 병행되면서 노동시간 구조 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노무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라벨+4.5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고 자문·상담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워라벨+4.5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을 위한 사전 논의 성격으로, 기업 참여 확대 방안과 지원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단순 제도 인내를 넘어 실제 기업

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워라벨+4.5 프로젝트'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핵심이다.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도입 수준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만~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미만 줄이는 부분 도입 기업에는 월 20만~30만원,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전면 도입 기업에는 월 40만~5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생명·안전 관련 업종이나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기업에 추가 월 10만원이 더해진다. 신규 채용까지 연계될 경우 최대 월 60만~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상의는 제도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자문·상담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

노무 전문가를 기업별로 1대1 매칭해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프로젝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참여 기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초기 기업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고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전문가 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들이 보다 쉽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